東北亞의 新經濟秩序

1993. 12.

金 圭 倫 (國際硏究室 硏究委員)

民族統一硏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硏究院의 硏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硏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硏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硏究院 國際硏究室

序　　文

冷戰以後時代 세계경제의 변화추세는 동북아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東北亞地域에서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러시아 연방이 市場經濟體制로의 編入을 加速化하고 있으며, 중국이 改革·開放을 深化하는 한편 북한도 制限的이지만 경제적으로 開放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지역에 새로이 胎動하고 있는 經濟秩序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의 참여로 인하여 기존의 질서와는 상이한 양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인 바,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東北亞 新經濟秩序를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韓國의 對應 및 南北韓 經濟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였다.

본 연구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및 한반도 統一環境 變化를 展望하는데 도움이 되고, 統一政策 立案에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12

民族統一研究院

國 際 研 究 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냉전의 종식은 기존 국제정치질서를 탈이념화, 탈군사화, 탈냉전화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러시아 연방이 市場經濟體制로의 編入을 加速化하고 있으며, 중국이 改革·開放을 深化하는 한편 북한도 제한적이지만 경제적으로 開放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신경제질서는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간 경제관계와는 상이한 양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첫째, 냉전이후시대 世界經濟秩序의 變化가 東北亞 經濟秩序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위상 및 역할을 個別國家的 차원에서 분석한 후 역내국가간 兩者的 및 多者的 경제관계의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이와 같은 세계적 차원과 동북아 차원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과 동북아의 신경제질서가 남북한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第 II 章 冷戰以後時代 世界經濟秩序 變化와 東北亞

1. 冷戰以後時代 世界經濟秩序 變化

냉전이후시대 세계경제질서의 다음과 같은 변화는 동북아지

역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直·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칠 것이다. 첫째, 냉전이후시대 세계질서는 경제력의 정치·안보력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의 증대로 근본적으로 平和的 性格을 가지게 되었으나, 국가간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채택 및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은 세계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變化시키는 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세계경제의 自由貿易化가 지속될 발판을 마련하였다. 넷째, 냉전이후시대 세계경제는 미국의 相對的 經濟力 弱化로 인하여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다극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유럽공동체의 통합으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는 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북미자유무역지대 출범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2. 世界經濟秩序의 變化가 東北亞에 미치는 影響

위와 같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는 냉전이후시대의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국제정치경제체제에 있어서 經濟力의 重要性 增大현상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게 하였다. 둘째, 세계경제의 多極化현상과 지역주의화 현상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미국의존 탈피와 지역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하고 있다. 셋째, 자유무역주의의 강화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한 지역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사회주의국가들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編入進展은 중국의 개방·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며 북한의 개방도 촉진하고 있다.

第 III 章 地域國家들의 經濟的 位相 및 關係

1. 地域國家의 位相 및 役割

域內國家들의 相對的 經濟力을 1992년 지표를 통하여 보면 첫째, 일본은 중국의 8.2배, 한국의 12.4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한국의 1.5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북한의 13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산업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중진국으로서 일본 다음가는 중요한 국가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이 선진국인 일본과 개발도상국인 중국 사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량역할 또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域內國家間 經濟關係의 特徵

동북아지역 역내국가들은 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선진국(일본), 新興工業國(한국) 및 開發途上國(중국, 러시아, 북한)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역국가들간 경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동북아지역의 5개국 중 안정된 자본주의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競爭的 相互依存關係에 있다. 둘째, 신흥공업국인 한국과 개발도상국인 중국 및 러시아간 관계는 依存的 相互補完關係이다. 셋째, 선진국 일본과 개발도상국 중국, 러시아 및 북한간 경제관계는 發展的 依存關係이다. 넷째, 중국, 러시아 및 북한 등 역내 개발도상국간 관계는 發展的 相互依存關係이다.

第Ⅳ章 東北亞地域의 多者間 經濟協力

1. 亞·太經濟協力體의 發展

「아·태경제협력체」는 1993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아가 가입함으로써, 한국, 선진 5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국가연합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르나이) 및 3개의 중국(중국, 대만, 홍콩)을 포함하여 17개국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태경제협력체」는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역내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첫째, 「아·태경제협력체」는 금번 제5차 회의를 통하여 「무역투자위원회」를 설립하였는 바, 「무역투자위원회」

는 域內 貿易自由化를 實際的으로 促進시키기 위한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금번 아·태지역 최초의 지도자회의 개최는 「아·태경제협력체」의 성격이 경제차원에서 정치적 차원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셋째, 아·태지역에는 「북미자유무역지대」, 「아세안자유무역지대」 및 구상차원의 「동아시아경제협력회의」 등 小地域次元의 경제협력기구가 존재 또는 발족예정인 바, 「아·태경제협력체」는 廣域次元의 經濟協力機構로서 이들 기구의 전반적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아·태경제협력체」의 발전은 단기적으로는 아·태지역과 구분되는 소지역차원의 동북아지역 다자간 경제협력체 구성에 장애가 될 것이다. 다만, 두만강개발사업과 같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적 환경오염 문제 등 역내 특유의 사안에 대한 다자간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

2. 豆滿江地域 開發의 重要性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연방, 몽골이 정회원국으로 일본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동북아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政府次元의 多者間 協力事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국제

금융기관 및 역외국가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은 開放性을 유지할 것이다. 셋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향후 약 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중인 바, 동북아 경제협력의 發展方向에 대한 青寫眞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중국과 러시아연방 및 북한 등 경제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국가들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므로 동 계획의 성공여부는 동구 개혁·개방의 성패와 더불어 주목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연합개발기구」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냉전이후시대 國際聯合의 機能擴大와 관련한 可能性과 限界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第 V 章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展望

1. 日本優位 持續

2000년의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구매력에 기초한 국내총생산 예측치는 과장된 면이 있으나, 중국의 경제력이 2000년에는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시장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을 볼 때, 2000년에는 일본이 중국의 5.4배, 한국의 9.3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1992년도 기준 격차보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은 한국의 1.7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거시적 경제지표 예측결과는 역내에서 日本의 經濟的 優位가 持續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우열관계는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통일여부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2. 相互依存關係의 深化

동북아지역의 양자간 경제관계는 역내무역 및 직접투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선진국 대 후진국간 경제관계 형태인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점진적으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간 경제관계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던 무역장벽이 해소됨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무역의 증가로 相互依存度가 深化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한 역내국가들은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역내국가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3. 多者間 經濟協力 摸索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점증하는 경제협력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기구의 설립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東北亞地域의 多者間 經濟協力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동북아지역에도 소지역적인 경제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제도적 장치는 「아·태경제협력체」의 틀 안에서 또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본방향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 소지역적 차원의 경제협력기구가 가시화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세계적 역할 및 과거사문제, 역내국가들의 긴밀한 대미 의존도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다자간 경제협력기구가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역내국가들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여타지역에 대하여 폐쇄적인 지역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開放的 地域主義에 바탕을 둔 동북아지역 다자간 경제협력은 역내국가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의무보다는 협의를 통한 협력을 추구하는 협의체 수준의 기구설립을 추진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동북아지역에 다자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국가간의 공식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구의 설립보다는 國家間 境界를 자연스럽게 超越하는 자유경제지역 개념의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綜合展望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는 선진국이며 동시에 경제력이 큰 국가인 일본과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의하여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의 개방여부와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여부는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기도 하지만 통일의 형태 및 시기에 따라서는 東北亞 新經濟秩序의 方向을 결정짓는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신경제질서는 1990년대의 형성과정을 거쳐 2000년대에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신경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북아지역의 국가간 경제관계는 당분간 양자간 관계가 주도하던 과거의 양상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多者間 協力 및 問題解決 方式이 漸進的으로 그 領域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일본과 중국의 양대 경제강국이 신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3개국간의 경제적 협력은 국가간 관계보다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신경제질서의 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第 VI 章 結 論

1. 東北亞 新經濟秩序와 韓國의 役割

한국은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신경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수준 차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中進國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이룩한 경제성장이 수출주도정책에 의하여 가능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여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도 開放性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질서의 안정적 유지는 군사·안보면에서의 불안정 요소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면에서 역내국가들이 安定的 經濟發展을 이룩할 때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유도를 위하여도 역내 경제체제 전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야 한다.

2. 東北亞 新經濟秩序와 南北韓 經濟關係

동북아 신경제질서의 형성에 있어 한반도는 통일이 실현될 경우 신경제질서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자로 등장할 수도 있으나, 분단상태의 지속 경우 남북한 경제관계는 새로이 형성될 동북아 경제질서에 의하여 제약받는 피동적 입장이 될 것이다. 첫째, 韓半島의 동북아지역에 있어 地經學的 重要性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통일여부는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흐름을 제약 또는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 문제이다. 둘째, 일본에 이어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중국과 인접한 북한은 현재보다도 더 중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의 증대는 남북한 경제관계의 경직성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동북아 신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한민족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에 있어 多者間 方式을 적극 活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제연합개발기구 주관하에 역내국가들이 다자간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한 상태에서 국제연합의 결의안 및 국제적 압력을 받던 1993년 5월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계획관리위원회를 평양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를 개방시키는 데 있어 다자간 경제협력 방식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적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다자간 형태의 접근은 단독형태보다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에 의한 효과를 남북한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하여 차단된 南北輸送網을 연결하는 것을 경제협력의 우선과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수송망의 연결은 남한의 중국 동북3성에 대한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유럽대륙을 향한 수송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간, 일본의 대유럽 물류수송에 한반도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이 한반도의 통일을 대전제로 한다고 할 때, 한국은 2000년대를 향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包括的 次元에서 接近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이 궁극적으로는 한민족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방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目　　次

第Ⅰ章　序論 ……1

第Ⅱ章　冷戰以後時代 世界經濟秩序 變化와 東北亞 ……3

1. 冷戰以後時代 世界經濟秩序 變化 ……4

2. 世界經濟秩序의 變化가 東北亞에 미치는 影響 ……5

第Ⅲ章　地域國家들의 經濟的 位相 및 關係 ……8

1. 地域國家의 位相 및 役割 ……8

2. 域內國家間 經濟關係의 特徵 ……11

第Ⅳ章　東北亞地域의 多者間 經濟協力 ……14

1. 亞·太經濟協力體의 發展 ……14

2. 豆滿江地域開發의 重要性 ……26

第Ⅴ章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展望 ……33

1. 日本優位 持續 ……33

2. 相互依存關係의 深化 ……36

3. 多者間 經濟協力 摸索 ……38

4. 綜合展望 ……40

第Ⅵ章　結論 ……44

1. 東北亞 新經濟秩序와 韓國의 役割 ……44

2. 東北亞 新經濟秩序와 南北韓 經濟關係 ……45

第 I 章 序 論

냉전시대의 국제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東西 兩極體制의 군사·안보질서와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별되는 南北間 對立의 경제질서로 나뉘어진다. 소련의 붕괴로 대표되는 냉전의 종식은 기존 국제정치질서를 탈냉전, 탈이념화, 탈군사화하였다. 또한 과학의 발달과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의 범세계화 경향은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관리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러시아연방이 市場經濟體制로의 編入을 加速化하고 있으며, 중국이 改革·開放을 深化하는 한편 북한도 制限的이지만 경제적으로 開放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신경제질서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의 참여로 인하여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간 경제관계와는 상이한 양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동북아지역은 韓國, 北韓, 日本, 中國 및 러시아聯邦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내국가들의 대외경제정책과 경제발전전략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 또한 동북아 지역국가들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및 동남아국가연합도 필요한 경우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를 분석함에 있어 사용되는 질서의 개념은 예측가능한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국가행위에

대한 기대구조라 정의할 수 있다. 즉 국제질서란 한 나라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예측이 가능할 때 질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1] 따라서 질서는 일정한 관계의 정형으로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북아 신경제질서 형성의 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남북한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냉전이후시대 世界經濟秩序의 變化가 東北亞 經濟秩序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위상 및 역할을 個別國家的 차원에서 분석한 후 역내국가간 兩者的 및 多者的 경제관계의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이와 같은 世界的 次元과 東北亞 次元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있어서 韓國이 수행할 役割과 동북아의 신경제질서가 南北韓 經濟關係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1) 이상우.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장래."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pp. 615~30.

第 II 章 冷戰以後時代 世界經濟秩序 變化와 東北亞

세계적 차원에서 冷戰時代의 終結은 소련 및 동구권의 사회주의 붕괴라는 政治的 次元의 變化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이라는 經濟的 次元의 變化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냉전이후시대 세계경제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市場經濟體制로 순조로이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世界經濟의 역동성은 1970년대까지는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大西洋국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아시아지역 신흥공업국들의 비약적 경제성장과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의하여 亞·太地域이 世界經濟의 中心地域으로 浮上하였다.

한편 유럽공동체의 통합 진전으로 대표되는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 추세는 「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AFTA) 설치 및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 출범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는 국제경제관계를 보호무역주의화하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세계경제의 변화추세는 미국이 주도하던 냉전시대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多極化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단일시장의 출범과 일본의 지속적 무역흑자 기록 및 아시아신흥공업국의 경제력 강화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냉전

이후시대의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軍事·安保면에서는 유일한 초강대국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世界經濟의 관리측면에서는 미국경제의 부진으로 인하여 여타 선진국 및 지역협력체들과의 협조를 통한 지도력 유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 冷戰以後時代 世界經濟秩序 變化

냉전이후시대 세계경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변화는 동북아지역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直·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칠 것이다.

첫째, 냉전이후시대 세계질서는 경제력의 정치·안보력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의 증대로 국제관계가 근본적으로 平和的 性格을 가지게 되었으나, 경제력의 우위를 점유하고자 하는 각국들의 경쟁은 직접적 경제수단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수단까지도 동원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國家間 競爭을 촉발시키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채택 및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은 세계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變化시키는 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은 우선 세계경제의 유동성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한정된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할 경우 전체주의

국가의 재등장, 극우 민족주의의 대두 등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7년간 계속되어 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世界經濟의 自由貿易化가 지속될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선진국간 이해의 대립으로 타결이 지연되어 왔으나 1993년 12월 농산물분야의 예외없는 관세화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등에 대하여 관련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국들의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1995년에 발효할 예정이다.

넷째, 냉전이후시대 세계경제는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 약화로 인하여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다극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유럽공동체의 통합 진전으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는 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북미자유무역연합 출범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2. 世界經濟秩序의 變化가 東北亞에 미치는 影響

위와 같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는 냉전이후시대의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국제정치경제체제에 있어서 經濟力의 重要性 增大현상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게 하였다. 둘째,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과 지역주의화 현상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미국

의존 탈피와 지역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하고 있다. 셋째, 자유무역주의의 강화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한 지역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진전은 중국의 개방·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며 북한의 개방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동북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다음과 같은 동북아지역 자체의 변화와 함께 동북아 신경제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냉전시대의 동북아지역은 중국과 북한 및 소련 등 사회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와 한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냉전의 종결에 따라 소련은 사회주의체제를 이미 포기하였으며,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 정치에서는 사회주의체제 고수, 경제에서는 시장메카니즘의 도입이라는 二重的 體制를 運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는 등 중국식 개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움직임은 동북아의 신경제질서가 일본 및 한국 등 자본주의체제 국가와 중국, 소련, 북한 등 사회주의체제 국가로 양분되어 있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의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으로 인하여 선진국 일본, 중진국 한국 및 개발도상국 중국, 러시아연방, 북한으로 정립되는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러시아연방과 북한의 지난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은 중국의 두자리수 경제성장 및 한국 및 일본의 평균세계경제성장을 상회하는 경제성장과 대비된다. 즉, 북한과 러시아연방이라는 세계 최빈국, 세계 최고액의 무역흑자 보유국인 일본, 세계 최대인구 보유와 경제성장으로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및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호조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 등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병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域內國家들의 經濟力 差異는 냉전이후시대의 신경제질서를 모색함에 있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韓半島의 分斷持續 또는 統一은 동북아 신경제질서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는 동북아지역에서 지경학적으로 볼 때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분단현상은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반면에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는 동북아의 물류흐름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동북아지역 전체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第 III 章 地域國家들의 經濟的 位相 및 關係

동북아지역 경제질서 변화의 분석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연방 등 5개국이다.[2] 본 장에서는 역내국가들이 개별적 국가차원과 양자간 경제관계를 통하여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個別國家 次元에서는 역내국가들의 경제적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 있어서 각국의 역할을 분석한다. 둘째, 역내국가들은 兩者間 經濟關係를 통하여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양자간 경제관계 변화 또한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 地域國家의 位相 및 役割

역내국가들 중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1970년대에 8.2%, 1980년대에 8.8%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아시아신흥공업국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에 4.5%, 1980년대에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세계평균 3.5% 및 2.7%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중국은 197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저조한 경제성장률인 5.8%

2) 북한과 러시아연방은 통계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가 있다. 북한은 경제적 시계열 통계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연방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일관된 시계열 통계가 부재하다.

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9.4%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다.[3)]

위와 같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역내 국가들은 <표 1>과 같은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역내국가들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인구 및 국내총생산 통계를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주요 경제지표

(기준년도: 1992년)

	국토면적 (1,000㎢)	인구 (백만명)	GDP (십억달러)	1인당GDP[1)] (MR, 달러)	1인당GDP[2)] (PPP, 달러)
일 본	375	124	3,669	29,528	19,655
중 국	9,326	1,170	443	377	3,739
한 국	98	44	295	6,747	8,602
북 한	120	22	23	N.A.	1,100
러시아[3)]	6,619	8	33	N.A.	4,125

자료: DRI/McGraw-Hill,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1993.
주: 1) MR: Market Rate
2) PPP: Purchasing Power Parity
3) 러시아의 극동지역

첫째, 국부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을 볼 때, 日本이 1위, 中國이 2위, 韓國이 3위를 점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GDP에 있어서는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 중

3) DRI/McGraw-Hill,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Third Quarter 1993. 참조.

국은 3위이다. 그러나 1인당GDP를 실질구매력으로 평가한 지표를 보면, 중국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域內國家들간 경제력 비교는 절대적 경제력과 함께 相對的 優劣關係도 중요하며, 역내국가들의 상대적 경제력을 1992년 지표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중국의 8.2배, 한국의 12.4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中國은 韓國의 1.5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북한의 13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두번째로 큰 경제력 보유국가는 중국이다.

셋째,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이 중국에 비하여 産業化가 進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막대한 國土와 人口의 保有로 인하여 한국보다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도 산업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중진국으로서 일본 다음가는 중요한 국가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이 선진국인 일본과 개발도상국인 중국 사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량역할 또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域內國家間 經濟關係의 特徵

동북아지역 역내국가들은 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선진국(일본), 新興工業國(한국) 및 開發途上國(중국, 러시아, 북한)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국가들간 경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동북아지역의 5개국 중 안정된 자본주의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競爭的 相互依存關係에 있다. 한·일 양국은 무역구조면에서도 수직적 분업보다는 수평적 분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공히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비약적 경제발전은 항시 일본에 도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양국간 관계를 상호의존 형태로 발전시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제협력 대상으로서 한국은 경쟁대상인 것이다.

둘째, 신흥공업국인 한국과 개발도상국인 중국 및 러시아간 관계는 相互補完的 關係에 있다. 즉,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하여 경영기술과 자본의 공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는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는 수직적 분업을 위주로 한 무역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일본과 개발도상국 중국, 러시아 및 북한간 경제관계는 發展的 依存關係이다. 선진국 일본은 역내 개발도상

국에 대하여 자본의 공여국으로서, 역내 개발도상국은 일본에 대하여 1차산품 및 저가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관계인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 중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은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무한하다 할 수 있으므로 양국간 경제관계의 발전 전망 또한 밝다.

넷째, 중국, 러시아 및 북한 등 역내 개발도상국간 관계는 발전적 상호의존관계이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에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일부지역의 경제수준은 신흥공업국에 비견할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전국가적으로 平均的인 經濟水準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간의 무역형태는 相互依存關係로 특징지워진다. 한편 이들 국가들간 경제적 관계는 양적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므로 발전적 관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관계는 한민족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결론에서 별도로 분석할 대상이다.

역내국가간 경제관계는 무역으로 대표되는 바, 역내국가들의 1970년대 및 1980년대 무역발전 추세를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첫째, 한국의 비중이 1990년대에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日本의 比重은 전기간에 걸쳐 40%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이 역내에서 가장 큰 무역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일본의 域內貿易 依存度가 1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무역이 동북아지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으나 일본의 全體貿易에서 東北亞 域內貿易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동북아지역 무역을 여타지역보다 덜 중요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중국의 비중이 20% 정도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러시아의 비중은 지속적 減少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의 비중도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그 비중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동북아 각국의 역내무역 비중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일 본	44.7	45.2	45.9	43.6	41.6
중 국	16.6	20.3	21.7	29.4	20.3
한 국	18.0	15.9	17.7	16.1	26.8
러시아	16.0	14.5	11.4	8.9	.9.5
북 한	4.8	4.1	3.3	2.0	1.8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각년호.

第Ⅳ章 東北亞地域의 多者間 經濟協力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체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있다. 첫째, 「아·태경제협력체」는 1992년에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설치한 이후 1993년 제5차 회의(미국 시애틀)에서는 본 회의후 회원국 지도자간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아·태경제협력체」는 회원국간 결속력을 제고하고 협력의 수준을 격상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둘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3차에 걸쳐 개최된 「계획관리위원회」(PMC)를 통하여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한 관계국간 협정초안을 완성하였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다자간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 亞·太經濟協力體의 發展

가. 亞·太經濟協力體의 發展過程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간에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인 민간차원 기구는 1967년에 창설된 민간기업인 중심의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와 1968년 학계를 중심으로 창립된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가 있다. 또한 「아·태경제협력체」의 모체가 된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가 정부, 학계, 기업인의 3원

적 협의기구로서 1980년에 창립되었다.

이후 1985년에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 1988년에는 나까소네 일본 수상의 아·태협력 적극추진 의사표명 등이 있었으며, 1989년 한·호 정상회담시 정부차원 亞·太協力體 創設 합의후 동년 11월 「亞·太經濟協力體」(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출범하게 되었다.

「아·태경제협력체」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도성장에 따른 域內 相互依存度 深化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역내국가들이 공감함으로써 출발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新興工業國(ANIES)들은 1970년대의 고도성장에 이어 1980년대에도 개도국 平均成長率을 훨씬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둘째, 「東南亞國家聯合」 국가들은 아시아신흥공업국보다는 늦게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역시 개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셋째, 改革·開放정책의 성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은 1980년대에 괄목할 성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역내국가들의 역동성은 「아·태경제협력체」 발전의 바탕이 되고 있다. 것이며,

한편 「아·태경제협력체」의 출범당시 세계 경제환경은 전세계적 다자간 무역협상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妥結 展望이 불투명한 반면, 유럽공동체(EC) 통합의 진전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 趨勢가 深化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국가들은 지역주의에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였

다.

또한 아·태지역국가들간 交易依存度는 60%를 상회하여 선진국은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는 한편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선진국에 대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지역협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하에 출범한 「아·태경제협력체」는 1989년 11월 호주 캔버러에서 아·태지역 12개국 외무·통상장관이 회동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제2차 회의는 1990년 7월 싱가포르, 제3차 회의는 1991년 한국, 제4차 회의는 1992년 태국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제1차 회의에서는 開放性의 維持, 역내경제간의 多樣性 尊重, 합의에 의한 협력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태 협력의 제원칙을 채택하였다.

둘째, 제2차 회의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妥結을 促求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무역 및 투자데이타 검토,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수산, 해양자원 보존 등 7개 협력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고 실무반을 발족시켰다.

셋째, 제3차 회의에서는 아·태경제협력체의 목표 및 활동범위를 규정한 서울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에 명시된 아·태경제협력체의 목표는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의 발전도모, 開放的·多者間 交易秩序의 확립·강화, 관세무역일반협정 원칙에 의거한 교역장애요인 제거 등이며, 활동범위는 정보의 교환 및

정책의 협의, 무역장애 제거를 위한 전략수립, 무역, 투자, 자본교류의 촉진, 협력사업의 전개 등이다.

넷째, 제4차 회의에서는 「아·태경제협력체」 사무국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아·태경제협력체」의 장기적 비젼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저명인사그룹을 발족시켰다.

다섯째, 제5차 회의에서는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아가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17개국이 되었다. 「아·태경제협력체」 설립시의 회원국은 한국, 선진5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국가연합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르나이) 등 12개국이었으며,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 3개의 중국(중국, 대만, 홍콩)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이 15개국으로 증가되었었다.

나. 亞·太經濟協力體의 發展方向

(1) 關聯國의 立場

(가) 美國

아·태경제협력체 출범당시 미국의 참가의도는 미국을 배제하는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을 방지하고 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妥結을 促求하는 한편, 對유럽共同體 協商力을 提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아·태경제협력체」를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을 위한 보조수단 정도로 인식하여 아·태경제협력체의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계속 지연되고 協商結果도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커지자 「아·태경제협력체」를 아·태지역의 多者間 貿易自由化 協商을 위한 기구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동아시아의 經濟的 力動性을 중시하여 「아·태경제협력체」의 역내무역자유화가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미국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태경제협력체」의 역내무역자유화는 미국의 貿易赤字 改善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시 천명된 「新太平洋共同體」 構想에 따라 아·태지역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상대적 경제력의 약화 및 냉전이후시대 세계질서의 다극화 현상에 따른 자국의 입지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경제 및 안보측면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견지하려 하는 것이다.

(나) 日本

아·태경제협력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여 왔던 일본은 호주의 「아·태경제협력체」 창설제안에 초기부터 支持立場을 表明하였다. 일본은 「아·태경제협력체」의 결성이 역내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며, 미·일 通商摩擦을 回避하는 한 방안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아·태경제협력을

지지하되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일본의 2차대전 중 아시아침략이라는 과거로 인하여 아·태협력을 주도할 경우 아시아국가들이 拒否感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일본은 이미 대다수 아시아국가들을 일본의 생산기지화하는데 성공하였으므로 굳이 전면에 나서 미국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거한다.

또한 일본은 미국주도의 역내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어 자국에 市場開放壓力으로 作用할 可能性을 警戒하고 있다. 즉, 일본은 「아·태경제협력체」의 경제동향 및 현안부문(ETI) 실무반 활동이 구체화되어 대일본 무역흑자 축소압력 강화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아·태경제협력체」의 實質的 政策協調는 牽制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中國

중국은 「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하여 자국의 市場經濟化를 促進시키고 경제개발을 가속화시키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GATT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한 경제교류의 유용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태경제협력체」내에서 홍콩이나 대만의 立地가 強化되는 것을 警戒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이 자국과

같은 정치적 입지를 가지는 것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라) 東南亞國家聯合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아·태경제협력체」의 급속한 진전이 ASEAN 국가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아·태경제협력체」의 발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아·태경제협력체」가 느슨한 形態의 協議體로 머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아·태경제협력체」의 域內 貿易自由化가 AFTA의 자유화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AFTA 결성의 이익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하여 「아·태경제협력체」에서 역내 무역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국가연합」은 미국이 아·태경제협력의 발전에 집착한 나머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亞·太經濟의 多樣性을 인정하지 않고 역내 개도국들에게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남아국가연합」의 태도는 마하티르 수상의 지도자회의 불참으로 대표된다. 마하티르 수상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의 성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말레이지아는 「아·태경제협력체」가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유럽공동체와 같은 統合을 推進하거나 自由貿易地帶化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 會議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 회의는 유럽단일시장의 출범 및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 등 유럽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협상 타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열렸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주요국이자 세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동 회의를 통하여 자유무역주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시 천명된 「新太平洋共同體 構想」을 가시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관계의 다자간 접근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하여 역내국가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상호의존도를 감안하여 아·태지역이 북미와 동아시아로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지역의 연계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아·태경제협력체」는 1993년 11월 17~19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제5차 閣僚會議를 개최하고 11월 20일 아·태지역 최초의 「指導者會議」를 개최하였다. 「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는 호주, 브르네이,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등 17개국이 정회원국으로, ASEAN 사무국, PECC 및 「남태평양포럼」(SPF)이 옵저버로 참여하였다. 17개국 중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아는 제5차 회의에 신규회원국으로 참가하였다.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는 말레이지아가 불참하였다. 동 회의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지역의 무역확대를 위한 비젼제시를 목적으로 제

4차 「아·태경제협력체」회의에서 결성된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은 「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의 著名한 學者 및 官僚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명인사그룹은 ① 「아·태경제협력체」가 亞·太地域 自由貿易의 目的을 설정할 것, ② 貿易擴大를 위한 實際的인 프로그램의 조기 실시, ③ 社會間接資本 등 開途國의 發展을 위한 技術的 協力, ④ 亞·太經濟共同體 構成을 위한 아 태경제협력체의 制度化 등 「아·태경제공동체」(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를 구성하기 위한 4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저명인사그룹」은 또한 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들이 域內貿易自由化를 위한 協定을 1996년까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역내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각국의 투자관련 규정을 명시한 「아·태투자코드」작성 등 실제적이고 광범위한 역내 무역 및 투자확대 프로그램을 즉각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들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가 연차총회에서 무역확대 프로그램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의 매3년 간격 개최를 제의하였다.

둘째,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 閣僚會議」는 멕시코 및 파푸아 뉴기니아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태경제협력체의 範圍를 擴大하였으며, 「貿易投資委員會」

(TIC)의 設置에 합의함으로써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한 실제적 조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회원국 문제와 관련, 「아·태경제협력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아의 제5차 회의에서의 新規加入 및 칠레의 1994년 가입 이외에는 향후 3년간 追加會員國의 加入問題를 留保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금년에 처음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는 「아·태경제협력체 指導者의 經濟비젼 聲明」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계 GNP의 50% 및 무역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역동적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亞·太地域의 經濟成長이 開放된 多者貿易體制에 基礎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1993년 12월 15일까지 타결을 촉구하였으며, 아·태경제공동체의 비젼은 開放性과 同伴者關係에 기초하며 무역과 투자장벽을 낮춤으로써 역내 및 역외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3) 亞·太經濟協力體의 發展方向

「아·태경제협력체」는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역내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첫째, 「아·태경제협력체」는 금번 제5차 회의를 통하여 무역투자위원회를 설립하였는 바, 「무역투자위원회」는 域內 貿易自由化를 實際的으로 促進시키기 위한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금번 아·태지역 최초의 지도자회의 개최는 「아·태경제협력체」의 성격이 경제차원에서 정치적 차원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즉,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는 경제지도자회의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으나, 역내 각국의 지도자들이 회동하였다는 점 자체가 政治的인 性格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클린턴 미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이 안보와 정치 및 경제의 제측면을 망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태경제협력체의 범위가 정치 및 안보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아·태지역에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小地域次元의 경제협력기구가 존재 또는 발족예정인 바, 아·태경제협력체는 廣域次元의 經濟協力機構로서 이들 기구의 전반적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표 3> 小地域次元의 亞·太 經濟協力 推進現況

	NAFTA	AFTA	EAEC
參加國	미국,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피, 브르네이	중국, 한국, 홍콩, 대만, ASEAN6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推進經過	92. 8 협상안 합의 94. 1부터 추진예상	91년초 泰國 제안 93. 1부터 추진	90년말 말레이지아의 EAEG제안이 91. 10 EAEC 구상으로 변경
性 格	향후 15년이내 자유무역권 형성 · 교역장벽철폐 · 경쟁환경조성 · 투자기회확대 · 지적재산권 강화	1993~2008 기간중 자유무역권 형성 · 공동특혜관세(CEPT) 도입 · 비관세장벽 철폐	국제협상시 공동보조, 역내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 개방을 통하여 자유무역체제 확립에 기여
展 望	· 자본, 기술, 노동 결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원산지규정 강화 등 역외수출에 대한 차별	· 제한적 대상품목 및 예외인정으로 자유화의 효과는 미지수 · 회원국간 경쟁적 이해관계 상존	· 초기에 미국의 반대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개방체제유지 및 APEC과의 조화를 선언함에 따라 성립 가능성 증가 · 경제블럭이 아닌 협의체 형태를 띨 전망

다. 亞·太經濟協力體와 東北亞 多者間 經濟協力의 關係

「아·태경제협력체」는 동북아를 포함하는 廣域的 次元의 多者

間 협력기구이므로 동 기구의 발전은 동북아지역 다자간 경제협력의 거시적 발전방향을 규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린턴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에 나타난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표명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역내국가들간 다자간 경제협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아·태경제협력체」에는 역내국가중 한국, 일본, 중국은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다자간 경제협력 참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참여도 상당한 한계를 가질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태경제협력체」가 실질적인 다자간 경제협력 조치를 가시화할 경우에는 아·태지역과 구분되는 동북아지역만의 小地域次元의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다음에 분석할 두만강개발사업과 같은 특정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중국의 공업화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등 역내 특유의 사안에 대한 제한적인 다자간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

2. 豆滿江地域 開發의 重要性

가.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發展過程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은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최초의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 및 관련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수립은 관련국가의 협조하에 「국제연합개발기구」(UNDP)가 주관하고 있다. 두만강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국제연합개발기구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동북아지역 4대 협력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고조되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1991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國際聯合開發機構 주관의 동북아지역협력에 관한 회의에서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199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연합개발기구 주관 회의에서는 국제연합개발기구가 두만강지역의 개발잠재력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4] 이에 따라 평양회의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 타당성 조사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하여 1993년까지의 投資以前段階를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연합개발기구는 1992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에서 두만강개발의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① 선봉, 훈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소삼각지역인 「두만강경제지역」(TREZ), ② 블라디보스톡, 청진, 길림성을 포함하는 대삼각지역인 「두만강경제개발지구」(TEDA), ③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천연자원의 공급, 산업의 발전, 하부구조의 개선 및 역내

4) M. Miller, A. Holm, and T. Kelleher,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1.

무역의 확대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 「동북아지역개발지구」(NEARDA)를 제시하였다.[5]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북경의 제2차(1992. 10) 및 평양의 제3차(1993. 5) 계획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개발대안을 평가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지원하고 주요분야의 협력을 추구하는 5개 회원국(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간에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and Consultative Commission)를 설치한다.

둘째, 정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될 「두만강지역개발공사」(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operation)를 설립한다.

셋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3개 접경국은 「두만강지역개발협정」(Agree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Area)에 합의하여 서명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접경국가 주권존중과 토지 임대원칙의 명시 및 유역 3개국간 「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ordinating Committee)의 설치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협정문이 관련국 고위정부 관계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1994년부터는 실질적인 투자집행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5) 外務部, 「豆滿江地域開發計劃」(서울: 外務部, 1993).

나. 豆滿江地域 開發에 대한 關聯國의 立場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연방, 몽골이 정회원국으로 일본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국들은 두만강의 개발이익 및 방향과 관련하여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두만강 접경국가이지만 북한·러시아연방과 달리 두만강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두만강을 이용한 동해진출에 관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두만강지역의 교통 및 수송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두만강 개발이 남쪽의 연안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북3성의 經濟活性化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소삼각지역 위주의 두만강 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삼각지역을 두만강개발 대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두만강 개발이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러시아연방의 기존 항구인 블라디보스톡이나 나호트카의 相對的 重要性이 弱化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두만강 개발과 관련하여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화하는 등 두만강지역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두만강 개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당면한 경제난을 부분적 개방을 통하여 타개하고자 하는 단기적 이익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등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한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경제개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두만강 개발을 통하여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연방 극동지방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두만강 개발사업을 통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 경험을 축적하여 북한의 경제개방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옵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두만강개발이 경제성이 있고 가시화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두만강지역이 개발될 경우 자국의 서해안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두만강지역을 경유한 유럽으로의 수송로 이용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마지막으로 몽골은 내륙국가로서 두만강지역개발이 자국의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 역할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意義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

6) 일본은 1992년 3월 「일·중 동북개발협회」의 하부조직으로서 「북동아시아경제위원회」를 발족시켜 두만강 지역개발에 대한 일본측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노무라증권 등 7개회사와 일·북한 무역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이 위원회는 1993년 4월 중국 길림성과 「두만강 개발공동위원회」 설립을 협의하는 등 두만강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李東輝, 「두만강 地域開發計劃의 國際政治經濟的 重要性 分析」(서울: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p. 11 참조.

첫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지만 역내국가들이 정부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완성된 계획서에 대한 관계국 고위정부관계자의 승인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동북아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政府次元의 多者間 協力事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재원조달문제와 관련 국제금융기관 및 역외국가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은 開放性을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성격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역외국가들과의 협력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향후 약 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중인 바, 동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에 대한 靑寫眞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중국과 러시아연방 등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들과 북한과 같이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므로 동 계획의 성공여부는 동구 개혁·개방의 성패와 더불어 주목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연합개발기구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냉전이후시대에 있어 국제연합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國際聯合의 機能擴大와 관련한 可能性과 限界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第 V 章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展望

냉전이후시대 세계경제질서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 및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은 동북아지역이 개별국가적 차원, 양자적 차원,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 발전하는 방향을 규정 또는 제시하는 것으로 본 장에서는 동북아지역의 신경제질서를 전망하고자 한다.

1. 日本優位 持續

국가간 경제력의 차이는 역내국가들의 발전경로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표 4>는 역내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연방과 북한은 현재 극심한 경제혼란과 경제난을 겪고 있으므로 양국가의 경제성장률 예측은 의미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예측

(단위: %)

	1993	1994	1995	1990-1995	1995-2000
일본	0.9	3.9	3.5	2.6	3.0
중국	11.4	7.0	7.8	9.2	8.2
한국	6.4	6.8	6.4	6.6	6.6

자료: WEFA Group, World Economic Outlook, 1993.

위 표가 보여주듯이 일본은 선진국으로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은 1990년대의 전반기에는 두 자리수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만 1990년대 후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중진국으로서는 높은 수준인 6%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예측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2000년의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첫째, <표 5>에서 제시된 중국의 구매력에 기초한 국내총생산액은 과장된 면이 있으나, 中國의 經濟力이 2000년에는 日本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시장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을 볼 때, 2000년에는 일본이 중국의 5.4배, 한국의 9.3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1992년도 기준 격차보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2000년의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단위: 10억달러)

	GDP (MR)[1]		GDP (PPP)[2]	
	1992	2000	1992	2000
일본	3,669	4,580	2,437	3,042
중국	443	844	4,375	8,337
한국	295	491	378	629

자료: DRI/McGraw-Hill,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1993.
주: 1) MR: Market Rate
2)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셋째, 중국은 한국의 1.7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위상을 현저히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세계 2위, 홍콩 및 대만을 포함한 중국은 세계 4위, 한국은 7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2002년의 10대 주요 경제주체

(단위: 10억달러)

	GDP	수 입	수 출
미 국	9,737	1,301	1,194
일 본	6,858	521	734
독 일	3,509	1,015	1,021
중화경제권	2,516	639	638
프 랑 스	2,295	541	535
이 태 리	2,021	345	404
영 국	1,759	474	446
한 국	893	284	320
카 나 다	880	416	338
인 도	586	67	61

자료: World Bank, World Bank Forecast, 1992.
주: 중화경제권은 중국, 대만, 홍콩

이와 같은 거시적 經濟指標 예측결과는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개별적 경제력을 근거로 볼 때는 역내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위가 지속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中國과 韓國의 優劣關係는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통일여부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의 성공여부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미래의 경제적 입지 또한 불투명하다. 북한의 경제력은 현재도 남한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동북아 신경제질서 형성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가가 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북한의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입지는 남한과의 통일경우를 감안할 때 중요해진다.

2. 相互依存關係의 深化

동북아지역의 양자간 경제관계는 역내무역 및 직접투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선진국 대 후진국간 경제관계 형태인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점진적으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양자간 경제관계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던 무역의 장벽이 해소됨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무역의 증가로 相互依存度가 深化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역내국가들의 경제관계가 전술한 바와 같이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내국가들은 역내 양자간 경제관계

의 확대가 각국 경제발전의 力動性을 提高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려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연방은 경제개발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자원빈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연방의 자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국가간 자원 및 생산요소상의 높은 보완성은 지역전체가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둘째, 한·소 및 한·중 수교는 동북아지역의 양자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역내 양자관계는 불완전한 현재의 형태를 탈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냉전시대에는 불가능하였던 한·러 및 한·중간 경제교류가 가능해지고 북한과 미국 및 일본과의 經濟交流도 增大될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역내 양자간 경제관계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셋째,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 통상마찰을 빚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장 개척은 일본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과 역내 개발도상국의 투자 및 기술이전 요구의 합치는 역내 양자간 경제관계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최근 수년간 경제적 성장은 중국의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동북아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연방은 경제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극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내 각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은 1993년에도 외국인투자법 제정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로 인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확대는 난관에 봉착하여 있다. 그러나 1994년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역내국가들과의 무역관계 및 북한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직접투자도 증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냉전시대의 정치적 장벽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국가들간 지리적 인접성은 역내국가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한 역내국가들은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역내국가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3. 多者間 經濟協力 摸索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점증하는 경제협력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기구의 설립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동북아지역에도 小地域的인 經濟協議體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제도적 장치는 「아·태경제협력체」의 틀 안에서

또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본방향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지역의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 다자간 경제협력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한편 아·태지역 경제협력은 대상지역에 따라 小地域 및 廣域次元으로 나뉘어지는 바, 광역적 차원에서는 회원국의 다양성과 경제발전의 상이성으로 인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분간 협의수준의 기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長期的으로는 동북아지역에 소지역적 차원의 실제적 협력기구가 가시화될 수 있으나, 短期的으로는 동북아지역에는 일본의 세계적 역할 및 과거사문제, 역내국가들의 긴밀한 대미 의존도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다자간 경제협력기구가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역내국가들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여타지역에 대하여 폐쇄적인 지역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역내국가간 다자간 경제협력은 아·태지역과 같이 開放的 地域主義를 추구할 것이며, 역내국가들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개방적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동북아지역 다자간 경제협력은 역내국가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의무보다는 협의를 통한 협력을 추구하는 협의체 수준의 기구설립을 추

진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동북아지역 다자간 경제협력의 방향을 지리적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동해안을 포함하는 환황해경제권과 한반도의 동해안과 중국의 길림성 및 일본의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동해경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 다자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국가간의 공식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구의 설립보다는 國家間 境界를 자연스럽게 超越하는 「자유경제지역」(Natural Economic Territory)개념의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역내국가들의 도시간 협력의 형태로 동북아의 주요수도간 연결 또는 주요 산업기지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상정할 수 있다.

4. 綜合展望

동북아지역의 신경제질서는 역내국가들의 경제체제 차이로 인하여 기존 자본주의 국가간의 경제체제보다 정치·안보적 변수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역내의 일본, 중국, 러시아연방 등 강대국의 존재로 인하여 이들 국가들간 經濟力의 역학관계는 동북아 신경제질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안정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경제력을 향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은 일본의 역내 주도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은

중진국의 위치에 머무를 것인가 또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있다. 韓半島의 統一與否는 韓國이 동북아지역에서 經濟強國이 될 可能性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는 선진국이며 동시에 경제력이 큰 국가인 일본과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의하여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중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세계경제 역동성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중국,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의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과 막대한 시장규모는 동북아를 세계경제의 역동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또한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1995년에 출범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여부와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여부는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從屬變數이기도 하지만 통일의 형태 및 시기에 따라서는 동북아의 신경제질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獨立變數가 될 수 있다. 즉, 남북한 통일이 급변사태없이 점진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통일은 역내 경제관계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남북한 통일이 무력에 의하거나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남한의 경제력으로 북한의 낙후된 경제력을 단시일내에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한반도에는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후자의 경우,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및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경제행위자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급변사태 발생으로 인한 한반도 통일의 부정적 영향이 주변국들에 미쳐 동북아지역 전체를 불안한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변국가들이 점진적인 한반도 통일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동북아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도 주변국들의 협조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신경제질서는 1990년대의 형성과정을 거쳐 2000년대에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신경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 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북아지역의 국가간 경제관계는 당분간 양자간 관계가 주도하던 과거의 양상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多者間 協力 및 問題解決 방식이 漸進的으로 그 영역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일본과 중국, 양대 경제강국이 신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3개

국간의 경제적 협력은 국가간 관계보다는 民間次元의 交流가 신 경제질서의 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종 산업간의 협력 또는 같은 이해를 가지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第 VI 章 結 論

1. 東北亞 新經濟秩序와 韓國의 役割

한국은 지난 20여년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국가의 하나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성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의 성공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성장경로를 밟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신흥공업국 중 다른 3개국가와 다른 점이 있다. 즉,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근본적으로 중국계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중화경제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들 3개국은 한국과 비교할 때, 인구, 국토, 국민총생산 등에서 훨씬 작다.[7]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은 1980년대 초반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현재 중공업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타국가들은 중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따라서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신경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수준 차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국의 중진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7) 한국의 1992년 국민총생산(GNP)은 2,940억달러인데 비하여, 대만은 2100억달러, 홍콩은 810억달러, 싱가포르는 460억달러이다. 1992년의 인구는 한국이 4,300만, 대만이 2,000만, 홍콩이 600만, 싱가포르가 300만이다.

첫째, 한국은 지난 20년간 이룩한 경제성장이 輸出主導政策에 의하여 가능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여 동북아의 신경제질서도 개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아·태경제협력체에서의 자유무역 기조유지를 先導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무역환경을 자유화하도록 역내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북아질서의 안정적 유지는 군사·안보면에서의 불안정 요소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면에서 역내국가들이 안정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유도를 위하여도 역내 경제체제 전환국가들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을 支援하여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으로 채택하고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체제의 불안정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전환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정세가 불안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선발 경제개발국가로서의 경험을 전수하여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東北亞 新經濟秩序와 南北韓 經濟關係

동북아의 신경제질서가 1990년대에 역동적 변화과정을 거쳐 2000년대에 완성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질서의 형성과

정은 남북한 경제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동북아 신경제질서의 형성에 있어 地經學的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는 통일이 실현될 경우 신경제질서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자로 등장할 수도 있으나, 분단상태의 지속 경우 남북한 경제관계는 새로이 형성될 동북아 경제질서에 의하여 제약받는 피동적 입장이 될 것이다. 첫째, 한반도의 동북아지역에 있어 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통일여부는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흐름을 제약 또는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 문제이다. 둘째, 일본에 이어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중국과 인접한 북한은 현재보다도 더 중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의 증대는 남북한 경제관계의 경직성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동북아 신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한민족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韓國은 北韓과의 經濟關係 發展에 있어 多者間 方式을 적극 活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제연합개발기구 주관하에 역내국가들이 다자간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한 상태에서 국제연합의 결의안 및 국제적 압력을 받던 1993년 5월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계획관리위원회를 평양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

이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를 개방시키는 데 있어 다자간 경제협력 방식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적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다자간 형태의 접근은 단독형태보다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에 의한 효과를 남북한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하여 차단된 南北輸送網을 連結하는 것을 경제협력의 우선과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수송망의 연결은 남한의 중국 동북3성에 대한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유럽대륙을 향한 수송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간, 일본의 대유럽 물류수송에 한반도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이 한반도의 통일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할 때, 한국은 2000년대를 향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包括的 次元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이 궁극적으로는 한민족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방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김성훈. 「동북아시대의 한민족」. 서울: 도서출판 경실련, 1993.

서울大學校 世界經濟硏究所. 「新國際秩序와 東北亞 經濟協力」. 서울: 서울大學校 世界經濟硏究所, 1992.

이상우.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장래."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李東輝.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國際政治經濟的 重要性 分析」 서울: 外務部 外交安保硏究院, 1993.

李秉龍. "東北亞 國際秩序 變化와 韓半島 統一環境." 한국발전연구원 주최 제5회 학술 심포지엄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韓半島」 발표논문, 1993.

李庭植. "新國際秩序의 性格과 展望."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주최 학술회의 「東北亞 安保政勢와 南北韓 統一展望」 발표논문, 1993.

外務部. 「豆滿江地域開發計劃」. 서울: 外務部, 1993.

鄭永祿. 「東北亞地域 貿易構造와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서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992.

鄭鐘旭·李鴻永 共編. 「新國際秩序와 韓國의 選擇」. 서울: 인간사랑, 1993.

韓鎭涉. "새로운 東北亞 政治秩序의 動向: 그 可能性과 限界."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주최 학술회의 「東北亞

安保政勢와 南北韓 統一展望」 발표논문, 1993.

APEC Ad Hoc Economic Group Meeting. *Vision for the Economy of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Year 2000 and Tasks Ahead.* 1993.

DRI/McGraw-Hill.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1993.

East Asia Analytical Unit. *Korea to the Year 2000. 5.*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Funabashi, Yoichi.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1993.

Group on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Options for Japan.* 1993.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199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Various Years.

M. Miller, A. Holm, and T. Kelleher.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2.

Thurow, Lester. *Head to 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92.

World Bank. *World Bank Forecast.* 1992.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91-01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92－11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硏究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硏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硏究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硏究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硏究

93－15 金正日著作 解題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硏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93－19　예멘 統一事例 硏究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畵分析을 中心으로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硏究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改訂版)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교포政策
93－26　日本의 核政策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쵸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옐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의 展開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論 叢〉

統一硏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硏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硏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硏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硏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研究報告書 93-2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